



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세계화의 관점에서 복지제도를 강구하자

**우**리들은 ‘복지국가의 위기’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사회보장비가 증가하면서 복지비 지출이 국가운영에 부담이 되어 사회보장비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잘 알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돋게 되면 이들은 의존심이 늘어나서 국가의 재정부담은 점점 더 가속화되어 중국에는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된다는 주장 등 갖가지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이론이 있다.

여기서 필자는 그러한 이유들 중의 하나로써 「세계화」가 복지국가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의 하나가 아닌가 주장하고 싶다. 선진국의 복지국가 발달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때, 복지국가 위기론은 국가발전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영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세기에 영국의 국왕이 기톨릭 교회를 폐쇄하고 성공회를 만듦으로서 기톨릭 교회의 재산을 복지정책에 쓰기 시작하였고, 17세기에 들어 영국의 해양력이 뒷받침되어 국가의 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빈곤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포하게 되었다. 이후 영국의 국가 발전이 최고조에 이른 20세기에 들어서서 사회보장책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세계화의 물결이 일면서 영국의 부가 더 이상 국가에 축적되지 못하고 세계로 빠져나가 복지국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서구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도 같은 경우를 맞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장벽이 약화되자 자본은 한곳에 모여 있지 못하고 편한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즉 기업들은 세금의 부담이 적은 나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제는 부가 국

전국적인 사회보장의 틀이 미약한 우리로서는 이를 보완해 나가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갖추어야 하는 이중고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발전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사회복지 틀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서구의 사회보장틀을 뛰어넘어 우리의 가치관과 공동체 삶의 모습이 녹아 있는 새로운 제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가에 축적되기보다는 세계로 분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자 과거와 같이 국가중심적 사회보장제도는 흔들리게 되었다.

이런 세계화의 현상은 어떤 결과를 우리사회에 가져올까? 우리나라에는 군사정권 이후 정경유착의 문제가 있을 정도로 국가가 부의 축적을 강하게 유도하여 부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외원에 의존하던 사회복지를 우리정부가 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OECD와 WTO에 가입함으로서 세계경제 속에 휘말린 우리나라의 빈곤자의 기초생활복지에도 힘겨운 상태가 되었고, 연금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내외적 압박과 유인책에 의해서 많은 국내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서구의 복지국가형 사회보장책을 펴나가기에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선행되는 서구의 사회보장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힘들다면 어떤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 적합할까?

서구는 지금 사회보장형태가 국가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중앙정부가 책

임을 지는 사회에서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 내에 사회 안전망을 세워서 지역사회가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복지의 틀을 잡아나가고 있다. 전국적인 사회보장의 틀이 미약한 우리로서는 이를 보완해 나가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갖추어야 하는 이중고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발전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사회복지 틀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서구의 사회보장틀을 뛰어넘어 우리의 가치관과 공동체 삶의 모습이 녹아 있는 새로운 제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

